

韓日 歴史教科書の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

김도형

- | | |
|----------------------------|--------------------|
| I. 머리말 | IV. 청일전쟁 전후의 한일관계 |
| II. 근대 한일관계의 시작과 朝日修好條規 | V.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과 병합 |
| III. 1880년대 초 조선의 근대개혁과 일본 | VI. 맺음말 |

I. 머리말

한일관계는 1876년 朝日修好條規 이후 새로운 ‘근대적’ 모습으로 바뀌었다. 華夷體制, 朝貢體制라고 불리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서양 열강이 주도하는 ‘萬國公法’ 이름 하의 국제체제로 개편되어 갔다. 만국공법체제는 형식적으로 모든 나라가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힘에 바탕을 둔 제국주의적 국제질서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근대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임한 동양 3국(청, 일본, 조선)의 대응 태도는 매우 달랐다. 청은 이미 서양 열강에게 침탈을 당하면서 각종 이권을 빼앗기고, 또한 주변의 ‘조공국=속국’도 차례로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화이체제의 과멸에 직면하였다. 일본은 서양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맺고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었으나,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당했던 불평등조약을 이웃 나라인 조선에 강요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국은 마지막 남은 ‘屬國’ 조선을 근대적인 국제질서 속의 ‘속국’으로 침탈하고자 종전 ‘자주’하던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은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조선은 청과 일본 양국의 ‘생명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정부와 집권층의 대부분은 화이체제 틀 안에 안주하려 하였다. 오히려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강의 침탈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도 점차 국제정세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1880년대에 들어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않는 가운데 서양 여러나라와 새로운 국제 관계를 맺어 갔다.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전근대적 조공체제와 근대적 만국공법체제가 동시에 작용하였다.

일본은 중국 중심의 전근대적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근대적’ 국제질서를 지향하였다. 이는 대외팽창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선을 마음대로 침략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전근대적 ‘교린’ 관계의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통신사 교류는 1811년에 중단되었는데, 한일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은 ‘朝日修好條規’를 통해서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제국주의적 국제질서 하에서 유지되었고, 결국 1910년 한일병합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의 조선 침탈 과정에서는 양국 사이에 수많은 조약들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겉으로 조선의 영토와 자주독립을 보장한다고 내세우면서 침략을 행하였다. 한일 간의 조약은 외형상 쌍방이 합의한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힘의 우열에 의해 매우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구조로 전개된 한일 관계를 보는 시각은 당시에 서로 매우 달랐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대대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동양의 평화, 한국(조선)의 문명화를 내세우며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현재의 한일 역사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강조하고, 한일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침략을 미화하는 논리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조약을 강요”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성, 강압성을 은폐하고 이를 “합법적인 형태”로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이 조약들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결국 당시의 제국주의 침탈과 식민 지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간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이 있을 때마다 한일, 중일 간에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일어났다. 최근 2001, 2005년에는 지금까지 어느 교과서보다도 우익 성향이 강한 교과서가 만들어져 문제가 더욱 격하게 일어났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에서는 이를 다룬 연구들도 많다.¹⁾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양국 교과서

1) 학문적 차원에서 분석한 것 가운데는 정재정, 2002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와 그 전망> 《韓國

에 서술된 한일관계와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정한 조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들어난 字句의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에 흐르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곧 조약 체결에서 일본이 행한 強壓性과 不法性을 어떤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는냐의 문제일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주체적인 근대화 개혁운동과 일본 침탈에 대한 저항운동을 어떻게 결합하여 기술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²⁾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재 사용 중(2005년 검정)인 일본의 중학교 사회(역사) 교과서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삼은 扶桑社, 《新しい歴史教科書》와, 채택율이 높은 東京書籍, 《新しい社會 歴史》, 그리고 扶桑社 교과서 핵심 인사들이 2009년에 다시 만든 自由社,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도 덧붙여 살펴보았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도 참조하였다. 한편 한국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국정(교육인적자원부, 2002)이기 때문에 한 종류만 있다. 본고에서는 이 세 교과서를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주로는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 교과서를 분석,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³⁾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나라	구분	연번	출판사	저자
일본	중학교 사회	①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藤岡信勝 외
		②	2005 《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五味文彦 외
		③	2009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한국	중학교		2002 《중학교 국사》(교육인적자원부)	

* 일본교과서는 檢定濟年을 기준으로 함.

史研究》116 ; 한국사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 편, 2008 《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경인문화사) 등이 참조된다.

2) 이런 문제의식을 정리하는데 다음의 연구도 참고하였다. 김민규, 2009 <한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조약’ 관련 사항에 대한 분석(1876~1895)> ; 김기정, 2009 <한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러일 전쟁 전후의 국제정세와 일본의 식민지 강제편성과정 : 1904~1910년간 한일간 체결되었던 조약을 중심으로> (이 책에 수록되어 있음)

3) 인용한 부분의 밑줄은 강조를 위해 인용자가 한 것임.

Ⅱ. 근대 한일 관계의 시작과 朝日修好條規

1.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그 성격

막부 말기, 서양과의 통상 교류를 거부하고 ‘鎖國’ 정책을 취하던 일본은 서양의 무력에 굴복하여 불평등조약을 맺고 ‘開國’하였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이른바 근대국제질서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일본은 서구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 체제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밖으로 침략을 시작하였다. 주변 지역(류큐, 북해도 등)으로 세력을 확산하여 영토를 확정하고, 다음 단계로 조선을 넘보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먼저,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문서를 조선에 보냈다. 새롭게 국가체제를 만들었던 점에서 이 문서에 사용된 용어가 종전의 것과 달랐다. 일본 국왕을 높이고, 조선 국왕을 낮추어 보는 표현 등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舊例를 들어 문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일본 국내에서는 이를 빌미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征韓論이 일어났다. 일본 국내의 정치변동 속에서 정한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실각하였지만, 정권을 잡은 세력들도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드디어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운양호 사건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마침내 朝日修好條規(이른바 江華島條約)가 체결되고, 한일 간에는 새로운 ‘근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조약체결을 강요했던 일본이 특히 유의했던 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조선을 청의 영향권에서 떼어내는 일이었다. 곧 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 질서를 무너뜨리고, 구래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의 朝日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을 자유롭게 침탈하기 위한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었다.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이를 중시하여 그 조약 제1관에 “조선은 자주(自主)의 나라”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은 근대적인 질서, 곧 제국주의적 국제질서를 조약 속에 담으려 하였다. 곧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그들이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서 당했던 내용과, 또 서구 열강이 중국을 상대로 맺었던 내용을 조선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조선은 문호개방의 조건으로 아편 수입, 무기 수입, 천주교 포교 등을 금지시키는 것에만 유의하여 관철시켰다. 그리하여 조문 속에 치외법권,

무관세권, 항구의 일방적 개방 등이 포함되었다.

조약체결에 임하는 조선의 입장은 일본과 달랐다. 국제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선은 여전히 중국을 믿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안주하려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요구한 ‘自主之邦’이라는 字句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전근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조선은 內治와 外交(交隣)에서 이미 ‘自主’의 나라였기 때문이었다.⁴⁾ 따라서 일본과의 수교는 그 동안 단절되었던 交隣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條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條規’라고 한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⁵⁾ 당시 정부는 西洋=夷狄은 당연히 배척해야 하지만, 일본은 서양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

물론 일본과의 통교는 일본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미 조선 내에서도 개항 통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정부의 핵심 세력 가운데서도 夷狄의 문물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北學論을 계승하고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대표하던 사람이 朴珪壽였다. 그는 청국 使行을 다녀오면서, 청국이 서양과 통교한 것을 이해하고,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도 서양과 통교하고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일본과의 ‘書契’ 문제가 일어났다. 박규수는 이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일본이 스스로 皇室, 勅 등으로 높여 부르는 것은 타국인 우리에게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또 圖書, 書幅, 封套 등의 문제는 큰 일이 아니므로 신경 쓸 것이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그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 처지에서 일본과는 信義에 의거한 交隣관계가 필요하다고 하고, 만약 우리가 書契를 거부하고 일본과의 수호를 거부하면 원한을 품게 된 일본이 무력적으로 침략하고, 이에 우리를 엿보고 있던 서양도 합세하게 되면, 이에 대응할 良策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였다.⁷⁾

이와 같이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많은 편차가 있었다. 이런 차이가 현재의 한일 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주로는 ①전근대

4) 적어도 당시에는 ‘自主’와 ‘獨立’은 다른 것으로 이해하였다. ‘독립’이라는 청국에서 벗어나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당시 사람들도 청일전쟁이 끝난 후에 ‘독립’되었다고 생각하였다.

5) 김민규, 2006 <조규? 조약!> 《역사비평》 75 ; 김민규, 2009 <앞 글>

6) 고종은 “與倭續好 匪洋伊和(왜와 더불어 계속 수호하고 서양과는 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8자야말로 긴요한 말이며 斥邪綸音의 포고나 洋貨禁輸論도 또한 바꿀 수 없는 논의이다”라고 하였다(《日省錄》 고종13년 1월 28일). 그러나 이에 비해 척사론자들은 ‘倭洋一體’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였다.

7) 김도형, 2004 <개항 전후 실학의 변용과 근대개혁론> 《東方學志》 124 참조.

동아시아 질서와 청·조선의 관계, 이와 관련된 ‘自主之邦’의 역사적 성격 문제, ②조약의 성격과 불평등성 문제 등에서 그러하다.

2. 일본 교과서의 서술

① 扶桑社(2005) ; ③ 自由社(2009)

명치정부는 유신 직후인 1868년 새로운 조선과 국교를 맺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이 준비한 국서에 부적절한 문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맺기를 거부하였다. 명치정부는 조선과의 외교에서는 시작부터 실패하게 되었다.(151쪽)

국내에서는 1873년 일본의 개국 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를 무례하다고 하여 사족들 사이에서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자는 征韓論이 끊어올랐다. 廢藩으로 일을 잃은 사족들은 징병령이 시행되자 무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여 불만을 고조시켰다. 그들 가운데에는 조선과의 싸움으로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과시하고자 하려는 자도 있었다. (...) (152쪽) <주: 그 뒤에 일본은 1875년 강화도 앞에 군함을 파견하여 무단으로 주변의 연안을 측량하는 등 압력을 가한 끝에 군함이 포격을 받고 교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강화도사건). 이를 이유로 일본은 이듬해인 1876년 일조수호조규를 맺어 조선을 개국시켰다.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 불평등조약이었다.>.(153쪽)

명치 신정부는 정권 수립 후 바로 조선과 국교를 맺으려 했다. 그러나 중국의 청조에 조공하고 있던 조선은 외교관계 맺는 것을 거절했다. 조선의 개국시킨 1876(명치 9)의 일조수호조규는 그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청조의 영향으로부터 조선을 분리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163쪽)

② 東京書籍(2005)

중국과 조선: 청과는 1871년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일청수호조규)을 맺었는데, 중국에 조공하고 있던 조선은 구미에 대하여 쇄국하고, 또 명치정부와의 국교도 거부하고 있었다. 정부 내에는 무력으로 개국시키자는 주장(정한론)이 고조되었다. 1873년 일단 사절의 파견이 결정되었는데, 구미에서 귀국한 岩倉이나 大久保는 국력의 충실이 먼저라고 하여 파견을 중지시켰다. 그 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는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1875년 강화도사건을 계기로 다음 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조약(일조수호조규)를 맺고, 조선을 개국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불평등조항을 강요한 것이었다.

일본이 조선·중국과 맺은 조약은 근대 국제법에 기초한 구미형의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와 대립하고, 일본과 중국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을 심화해갔다.(148쪽)

條約은 본래 이름인 “日朝修好條規”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대개 일본 국내의 정치 상황 속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군사적 압력’, ‘강요’, ‘압박’, ‘강경한 태도’ 등으로 표기하여, 일본이 조선에 대해 조약체결을 강압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 征韓論이 일어나고, 또 강화도사건(운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을 書契를 거부한 조선측에 전가하고 있어(①③), 정한론이 일어난 일본 국내의 사정을 외면하고 있으며, 또 조약 체결을 강요한 일본의 침략적인 의도를 은폐하거나 가능한 한 약화시켜 서술하고 있다.

강화도조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시 일본의 표면상의 입장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가령 제1관에 명시된 “自主之邦”에 대한 해석에서 잘 드러난다. 전근대적,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근대적인 형태로 바꾸었다고 강조하고 있고(②), 이를 위해 일본이 조선을 청국에서 분리시켰다는 것만 기술하여(①③), 일본이 이를 조약의 제1관에 넣은 실질적인 목적, 곧 조선의 침략하기 위해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던 점을 숨기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 조약이 불평등조약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불평등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단 ②에서는 ‘불평한 조약을 일본이 강요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불평등조약이 전근대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붕괴와 근대적 국제질서의 구축이라는 점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다.⁸⁾ ‘근대적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 그 근대의 이면에 숨어 있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후소샤 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는 불평등한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치외법권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일조수호조규와 조선의 개국: 일조수호조규는 “불평등조약에 의해 조선을 개국시켰다”라고

8) 이에 비해 일본이 서구와 맺은 불평등조약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일본이 이 불평등조약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교과서 곳곳에서 기술하고 있다. 가령 ①扶桑社에서는 “막말에 일본이 구미 제국과 맺은 조약은 상대국에게만 치외법권을 인정하거나, 일본에는 관세자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몇 가지 점에서 불평등한 조약으로, 일본인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구미 제국과의 법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조약개정은 메이지 일본인의 비원이자 일본 외교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고 하였다(156쪽). 그리고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일본의 외교 활동을 소개하고, 1894년 청일전쟁 직전 일영통상항해조약의 조인으로 치외법권이 철폐된 점, 청일전쟁 이후 미국도 치외법권 철폐에 응했다는 점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무츠 무네타츠의 의회연설(1893년)도 박스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는 “일러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인 1911년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자주권회복의 협상에 성공하여 조약 개정의 비원은 달성되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협상으로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었다”(157쪽)고 하여, 매우 감성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한국을 서술하는 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말하는 면이 많다. 당시도 페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웃나라를 개국시킨 것에 사이고는 분개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일조무역을 통하여 15세기에 이미 조선으로부터 왜관이라는 일본의 재외공관의 설치를 인정받았다. 에도시대에는 500명을 넘는 거류민이 在留하여, 일종의 片務的 治外法權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고, 영사재판권에 관해서는, 그것을 일조수호조규 제10조에 의해 확인시켰다는 것이 가능하다.⁹⁾

즉 강화도조약에서의 치외법권은 이미 조선시대의 倭館이 가졌던 권한을 새롭게 확인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불평등성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았다. 불평등조약을 가능하면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3. 한국 교과서의 서술

신미양요와 척화비: ... 한편 메이지유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갖춘 일본도 통상 수교를 요구해 왔으나, 그 외교 문서에 일본 국왕이 조선 국왕을 낮추어 보는 표현과 종래의 외교 관행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어 조선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194쪽)

운요호사건: 이때 일본이 조선에 교섭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마련한 일본은 조선에 대해 통상을 강요하기 위하여 운요호사건을 일으켰다(1875).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조선에 통상 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였다. 이는 서양 열강이 군사력을 앞세워 아시아 국가들에 강요한 방식을 본 뜬 것이었다.(197쪽)

강화도조약: 일본은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회담을 열자고 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행위를 야만적이고 침략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일부 관리들은 서양의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과 통상을 하여 서양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강화도에 두 나라 대표가 모여 조약을 맺으니, 이것이 강화도조약이다(1876).

강화도조약은 우리 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조선은 부산, 원산, 제물포의 세 항구를 개항하고, 개항장의 일정 지역에 일본이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강화도조약에서 조선이 자주 국가임을 밝혔지만, 조선에 불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로이 측량하는 것을 허용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도 일본의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불평등한 내용의 대표적인 예이다.¹⁰⁾(197-198쪽)

9) 扶桑社,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教師用指導書)》 239

10)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으로 제1관은 청의 종주권을 부정한 것으로 청이 일본의 조선 침략을 방해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였고, 9관의 자유무역, 10관의 치외법권 등을 열거하였다.

먼저 한국 교과서에서는 ‘조일수호조규’라는 본래의 이름보다는 강화도조약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보다는 강화도조약 체결이 일본의 무력적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무력 시위와 운요호사건을 지적하여, 일본이 ‘야만적이고 침략적’이었던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약의 내용에 3곳의 항구 개항, 일본인 거주 허용, 일본의 조선 해안 측량, 치외법권 등이 명시된 ‘불평등한 내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 조약은 “서양 열강이 군사력 앞세워 아시아 국가들에 강요한 방식을 본 뜬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강조하는 ‘自主之邦’에 대해서는 별로 유의하지 않는다. 전 근대 동아시아 질서, 朝貢 체제를 해석하는 관점이 한일 간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강화도조약을 “우리 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당시의 조선정부는 ‘舊交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일본과 ‘修好’하였다. ‘조규’와 1882년 조선이 서양의 국가 가운데 제일 먼저 미국과 맺으면서 표기한 ‘條約’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의 교과서에는 강화도조약을 맺게 된 것이 단순히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 내부에서 개항, 통상무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 즉 조선 내에서 “서양의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일본과 통상하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그 예로 박규수를 들었다.¹¹⁾ 후술되는 개화운동의 연원으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Ⅲ. 1880년대 초 조선의 근대개혁과 일본

1. 조선의 개혁사업을 둘러싼 일본과 청국의 대립

일본과의 통교 이후 조선정부는 富國強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양의 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근대화 개혁사업(이른바 洋務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에서는 일본의 근대화 성과를 알아보았다.¹²⁾ 개항 후 일본의 요

11)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12) 하우봉, 2000 <개항기 수신사의 일본인식>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 (아연출판부) 참조.

청으로 修信使 金綺秀를 파견하면서 정부에서는 “옛 관계를 닦고 신의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서양과 통교 이후 일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1880년에 두 번째 수신사 金弘集을 파견하여, 일본과의 관세 문제, 미국수출금지 조치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면서 일본의 근대화 사업 탐색, 미국과의 조약 체결 거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 탐문 등도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김홍집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취한 부국강병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청국 공사관의 黃遵憲과의 대담에서 국제성세, 부국강병과 自強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조선정부는 김홍집이 가져온 《朝鮮策略》을 富國強兵, 自強을 지향하는 정부의 근대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간행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수신사 파견과 동시에 조선정부는 청국에 병기제조, 군사훈련 등을 학습하기 위한 청년학도도 파견하기로 하였다(1880. 4). 또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였다(1880. 12).

정부의 근대화 개혁사업의 논리는 19세기 이래 집권층이 견지하고 있던 東道西器論이었다.¹³⁾ 유교적 윤리·도덕을 근본으로 하고 서양의 기술문명을 수용하자는 것이었다. 임오군란 직후 고종의 教旨에서 “서양의 종교는 배척해야 하지만 서양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農桑, 醫藥, 甲兵 등의 기술(군사기술)은 利用厚生의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였다. 물론 조선의 근대화 방안은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은 것이었으나, 西器 수용을 청국에만 의지하지 않고, 일본을 통한 수용에도 힘을 기울였다.¹⁴⁾

別技軍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고, 일본 교관을 고빙하여 훈련을 시킨 것은 조선정부 근대화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壬午軍亂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군란의 직접적 원인은 구식 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이었지만, 서울의 많은 도시민이 가담했던 것은 일본과의 통상 이후에 나타난 미국 가격의 騰貴와 빈민층의 생활난으로 인한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구식 군졸과 민중들은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여 불태웠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과 일본은 조선을 두고 대립하였다. 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군의 파병을 요청하였고, 청국은 宗主國으로서 속방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

13) 盧大煥, 1999 《19세기 東道西器論 形成過程 研究》(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일반적으로 동도서기론은 1880년대 초반에 제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韓治勳, 1968 <開港 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 《韓國史研究》 2 (1970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 李光麟, 1974 <開化思想研究> 《韓國開化史研究》 개정판).

14) 연갑수, 1993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112.

를 파견하였다. 군란의 배후자로 지목된 대원군을 청으로 잡아가고,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일본도 임오군란을 기회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일본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 조선 정부와 사후 처리 문제를 교섭하였다. 청국의 군대 파견으로 일본의 군사행동은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일본은 조선과 濟物浦條約을 맺었다. 군란의 首謀者를 처단하고,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불하며, 일본 정부에게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일본공사관 경비병을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조선 지배층 내부에서 정부의 근대개혁 방안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혁론을 제기하는 세력이 형성되었다.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였다.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에 출입하면서 明治維新 이후 추진된 일본의 근대화를 높이 평가하고, 또 福澤諭吉 등 문명개화론자와, 일본에 와있던 서양선교사와 접촉하면서 서구화, 문명화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갔다. 가령 박영효는 박규수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新思想’을 배우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일평생을 지배하는 기본 관념은 정히 이때(1882년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 인용자)에 받은 충동에서 나온 것”¹⁵⁾이라고 하였던 바와 같이, 일본의 문명개화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옥균, 박영효 등은 청국과의 事大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을 이루며, 또한 유교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서양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西歐化를 지향하였다. 이로써 그들이 동참했던 조선정부의 동도서기론, 곧 洋務開化論에서 이탈하여 마침내 甲申政變을 일으키게 되었다(1884).

갑신정변을 주도한 개화파는 민중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일본 군대를 믿고 정변을 일으켰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 파악하고 개화파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반격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대부분 일본 公使를 따라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정변 후, 청국의 간섭은 더욱 강화되었고, 반면에 일본은 세력 만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일본은 조선정부와 漢城條約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은 일본인에 대한 위훈금 지급, 공사관 건축비 배상 등을 얻었다. 또한 청국의 조선 지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선으로부터 청일 양군의 동시 撤兵과, 장차 파병할 경우에 사전에 서로 통보한다는 天津條約을 체결하였다(1885). 이제 일본은 청국과의 전쟁을 착착 준비해 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서술한 한일 역사교과서의 입장은 물론 다르다. 한국 근대개혁운동의 주체적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평가할 것이며, 일본은 이 개혁운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

15) 朴泳孝, 1926 <甲申政變> 《新民》 14, 40.

였고, 어떤 영향을 발휘하려고 했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그 차이의 핵심은 일본의 침략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하느냐에 달려 있다.

2. 일본 교과서의 서술

① 扶桑社(2005) ; ③ 自由社(2009)

청조 이상으로 두려운 대국은 부동항을 구하려 동아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던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1891년에 시베리아철도의 건설에 착수하고, 그 위협은 물밀듯이 닥쳐왔다. 조선 반도가 동방에 영토를 확대하고 있던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좋은 기지가 되어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하다고 생각하였다. 거기에서 일본은 조선 개국 후 근대화를 시작한 조선에 대하여 군제개혁을 원조하였다. 조선에서도 시찰단이 와서 명치유신의 성과를 배우려 하였다. 조선이 타국에 침략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 일본의 안전 보장에도 중요 하였다.(163쪽)

조선을 둘러싼 일청의 항쟁: 일본은 조선의 개국 후, 조선의 근대화를 돕기 위해 군대 제도의 개혁을 원조했다. 그러나 1882(명치 15)년 개혁에 뒤처져 냉대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선 군인의 폭동이 발생했다(임오사변). 청은 이것을 틈타 수천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바로 폭동을 진압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 1884년에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받아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한 김옥균 등의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이때도 청의 군대는 이를 탄압하였다(갑신사변).(164쪽)

② 東京書籍(2005)

조선반도의 정세: 이러한 가운데 조선에서는 일조수호조규를 맺은 일본과, 조선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청이, 세력을 다투는 것이 보다 확산되었다. 조선 국내에서는 명치유신에서 배운 근대화를 꾀하려는 친일파와,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구미에 대항하려는 親中派가 격하게 대립하였다.(154~ 155쪽)

조선의 근대화 개혁사업이 청, 일본의 대립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런 사정을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이를 기술하고 있다.

먼저, 일본교과서에서는 철저하게 일본이 조선의 개혁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지원한 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런 점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①③에서는 그 이유를 “일본의 안전 보장”, 특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즉 조선 반도가 러시아의 지배 하에 들어가면 조선이 일본을 공격하는 기지가 될 것이므로, “조선이 타국에 침략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일본의 안전 보장에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야 한다고 하였고, 그 일환으

로 군대 개혁[別技軍]을 “원조”했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주고, 조선에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결국에는 조선을 수중에 넣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근대화를 추진했던 조선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갑신정변과 관련된 기술에서는 주로 ‘친청 사대당’과 ‘친일 독립당’의 대립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갑신정변이 조선에서 일어난 부르주아 개혁의 하나였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국내 개혁세력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의 개혁구상과 관련되어 이를 주도한 개화파(급진개화파 혹은 변법개화파)와 東道西器的인 정치 세력(민씨 정권, 김윤식 등, 곧 양무개화파, 시무개화파 혹은 온건개화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교과서에서는 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만 親中派, 親日派, 혹은 ‘독립당’과 ‘사대당’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용어는 갑신정변을 근대개혁운동이라는 차원보다는 정권 쟁탈전으로 볼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세력 확대라는 면보다는 조선의 근대화 운동이 일본의 영향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교과서의 서술

시찰단과 유학생의 파견: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 조선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수신사 등의 파견) 정부는 개화정책을 주관하기 위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조직하여 일본에서 들여온 새로운 무기로 훈련시켰다.(199쪽)

개화와 척사의 대립: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후 보다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여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개화파라고 하였다. (...) 구식 군인들은 평소에 미워하던 정부의 고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으며, 별기군의 일본인 군사교관을 살해하였다. 이를 임오군란이라고 한다(1882). / (...) 게다가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압으로 제물포조약을 맺고, 임오군란 중에 일본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였으며, 나아가서 일본 공사관의 경비를 구실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199~200쪽)

갑신정변: 조선은 임오군란 후 청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고, 다시 집권한 민씨 세력은 개화정책에 소극적이어서 근대적인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근대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개화파 세력에게는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파 인사들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를 갑신정변이라고 한다(1884). / (...) 개화당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를 개

혁하여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는, 개화 사상이 국민 속에 퍼지지 못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개혁이 일본의 힘을 빌려 정변의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청군이 개입한 것도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201쪽)

갑신정변의 결과: (…)/ 그러나 일본은 도리어 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직원이 희생된 데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 무력시위를 하였다. 이에 정부는 한성조약을 맺고 사죄와 더불어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 갑신정변의 실패로 청에 비해 정치적으로 불리해진 일본은 청과 담판하여 텐진조약을 맺고, 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를 철수하고 장차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는 서로 알릴 것을 약속하였다. 갑신정변 이후에도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은 여전히 심하였다. (202쪽)

한국 교과서에는 개항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근대 개혁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일본이나 청국에 시찰단, 유학생을 파견한 점, 신식 군대[별기군] 설치, 統理機務衙門 등을 기술하여, 조선 정부 스스로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오군란에 대해서는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군란 이후 일본과 맺은 제물포조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에서도 일본 교과서와 매우 다르다. 일본에 기댄 ‘친일’ 세력의 ‘정변’으로 파악한 일본 교과서에 비해 《국사》에서는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한 근대개혁운동으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일본을 본떴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의지하였지만, 오히려 개화사상이 내적으로 성장하였던 점을 강조하고, 그 연원으로 北學思想을 들고 있다. 동시에 갑신정변의 실패, 한계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Ⅳ. 청일전쟁 전후의 한일관계

1. 청일전쟁 전후 국제관계와 일본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劃期를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 대열에 참여하고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청국은 전쟁의 패배로 유일하게 ‘속국화’할 수 있었던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洋務

運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變法運動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운동 기운이 높아지면서 청 왕조는 패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10년간 청과 일본은 각각의 ‘生命線’이었던 조선을 둘러싸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립하였다. 개항 이후 줄곧 조선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의 지위도 청국 상인들의 성장으로 약화되어 갔다. 청일전쟁 직전 조선에서의 청국, 일본의 무역액도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이 10년 동안 일본은 청과의 무력 대결을 준비하여 갔다. 1880년대 초반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정치세력을 부식하였는데, 갑신정변의 실패로 이런企圖가 벽에 부딪혔다. 그러자 일본 국내에서 ‘서양과 같은 입장에서 아시아 국가를 상대해야 한다’는 후쿠자와의 脫亞論이 대두하고, 야마카타(山縣有朋)의 ‘主權線, 利益線’이 외교정책의 지침이 되었다.¹⁶⁾

동학농민전쟁(1894)이 일어나자 조선정부는 청국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였다. 청국은 군대를 파견하면서 天津條約에 따라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였다(1894. 5. 1 음). 드디어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보내고, 청과의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잡게 되었다. 출병 기회를 노리며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던 일본도 즉각 출병하여 청군이 도착한 같은 날에 조선에 상륙하였다. 일본은 청국의 통보 가운데 “屬邦을 보호하는 舊例”라는 말을 트집 잡아 개전의 빌미로 삼아 이를 항의하였다.

그 사이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全州和約이 맺어졌다. 조선정부에서는 청일 양군의 철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철병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먼저 청국에게 조선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宗主權을 주장하고 있는 청으로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일본도 이런 반응을 노리고 있었다. 청국이 거부하자 일본은 단독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드디어 6. 21(음. 양력으로는 7. 23) 새벽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고 대원군을 앞세워 신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친일적 갑오개혁 정권은 청과 체결하였던 모든 조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7. 25). 그리고 일본군은 같은 날 충청도 豊島 앞바다에서 청국 군함을 격침시켰다. 선전포고 전에 행한 기습 공격이었고, 드디어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조선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조일합장합동조관(8.20). 조일양국맹약(8.26)을 강요하여 조선에서의 경제 이권을 얻고, 동시에 청일전쟁에 대한 조

16) 崔德壽, 2004 《開港과 朝日關係》 (고려대 출판부) 참조.

선 정부의 전면적인 협력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친일적인 정권을 세워 개혁사업(갑오개혁)을 간섭하고, 일본인 고문을 통해 조선의 보호국화를 꾀하였다.¹⁷⁾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청일 간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1895. 4. 17). 이 조약에는 조선의 ‘독립’을 첫 조항에 넣어, 청국의 조선에 대한 종전의 간섭권을 부정하였다. 일본은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을 지배할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대만을 식민지로 얻고, 요동반도도 할양받았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와 만주지역으로의 침략은 이 지역을 노리던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열강들을 자극하게 되었다.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직후 러시아는 독일·프랑스와 함께 일본에게 ‘요동반도의 중국 반환’, ‘조선에서의 독점적 이권반대, 이익균등’ 등을 요구하는 ‘삼국간섭’을 행하였다. 힘에 밀린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였다. 이후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일본은 다시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무력 대결을 준비하던 시간을 보내었고, 당시에 이런 시절을 ‘臥薪嘗膽’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삼국간섭 이후 세력이 약화된 일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조선의 왕후(명성왕후 민씨)를 시해하였다(乙未事變, 1895. 10). 그리고는 조선의 내정 개혁에 더욱 강하게 간섭하여 이른바 ‘乙未改革’이 추진되었다. 이때 행해진 斷髮令으로 대일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고, 전국적으로 보수적 유생층이 이끄는 의병이 일어났다. 일본의 간섭과 갑오개혁으로 실권을 잃은 고종과 친미, 친러 세력은 결국 俄館播遷을 단행하여 친일적인 갑오개혁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 시기를 다루는 한일 역사 교과서에서의 서술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조선의 독립, 내정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역사교과서에는 갑신정변 이후의 전쟁 준비, 조선의 출병 과정, 선전포고전의 기습 공격 등이 강조되고, 조선의 독립과 내정개혁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국과 일본의 전쟁이었지만, 그 主戰場이 되었던 조선이 더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독립’과 일본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국제질서의 성립이라는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논리 속에 깃들여 있는 일본의 침략적 면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라는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17) 청일전쟁과 관련된 것은 朴宗根 저, 박영재 역, 1989 《清日戰爭과 朝鮮》(일조각) 참조.

2. 일본 교과서의 서술

① 扶桑社(2005) ; ③ 自由社(2009)

조공국이 차례로 소멸하고 있었던 것은 황제의 덕의 쇠퇴를 의미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질서가 붕괴하는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여기에서 청은 최후의 유력한 조공국인 조선을 잃지 않으려 하여,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일본이 일청·일러의 두 개의 전쟁을 싸우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있었다.(163쪽)

조선을 둘러싼 일청의 항쟁: 조선에서 청조와의 세력 다툼에 2번 패배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급속히 군비를 확장하여, 이윽고 거의 대등한 군사력을 갖추기에 이르렀다.(164쪽)

일청전쟁과 일본의 승인: 1894년 조선의 남부에 갑오농민전쟁이라 불리는 폭동이 일어났다. 농민군은 외국인과 부패한 관리들을 추방하려고 하여, 일시는 조선반도의 일부를 제압할 정도였다. 약간의 병력밖에 가지지 못한 조선왕조는 淸에 진압을 위한 출병을 요청하였는데, 일본도 청과의 합의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일청 양군이 충돌하여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장은 조선 외에도 만주(중국동북부) 남부 등으로 확대되었고, 일본은 육전과 해전에서 모두 청을 압도하여 승리하였다. 일본의 勝因으로서는 신병기의 장비에 더하여 군대의 훈련·규율에 우수한 점이 있었던 것 외에도 그 배경에는 일본인 전체의 의식이 국민으로서 하나로 뭉쳐졌던 것이 있었다.¹⁸⁾(164~165쪽)

시모노세키조약과 삼국간섭 일청 양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함과 동시에 ... 고대부터 계속된 동아시아 질서는 붕괴되었다.(165쪽)

② 東京書籍(2005)

조선반도의 정세: ... 1884년에 일어난 정변이후, 청의 영향력이 강해졌고, 일본은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강해지는 가운데, 조선에 진출하지 않으면 일본의 前途도 위험하다고 보아, 청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비의 증강을 꾀하였다.(154~155쪽)

日淸戰爭: ... 이를 계기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여 8월에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싸움은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의 승리로 되어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는 청이 1)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2)요동반도·대만·펑호제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3)배상금 2억량(당시 일본 엔으로는 약 3억1천만엔)을 지불하는 것 등이 결정되었다. 대만을 영유한 일본은 대만총독부를 설치하여 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식민지 지배를 밀고 나아갔다.(156쪽)

일본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청일의 대립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술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분명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당시에 일본이 내건 ‘명분’을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여과 없이 소개하기도 하고, 혹은 단순한 객관적 사실만을 열

18) 扶桑社,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教師用指導書)》에서도 ‘일청전쟁과 일본의 勝因’에서 “명치유신으로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들어 국민단결하여 애국심이 불타는 일본”으로 기술하고, 이런 의식이 중화사상에 젖어 있는 청국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58쪽).

거하고 있다. 대체로 1880년대 중반 이후 10년간의 전쟁 준비, 천진조약에 의한 조선 출병, 전쟁을 조선의 내정 개혁과 독립을 명분으로 내건 점, 전쟁에서 이긴 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 명시된 ‘독립’을 강조하고, 이것이 동아시아 근대질서의 형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징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청일전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대립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①③에서는 조공국 조선을 잃지 않으려는 청이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②에서는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강해지면서 일본이 “前途”, 곧 自衛를 위해 조선에 “진출”하였다고 하였다.¹⁹⁾

천진조약 체결 이후 약 10년간,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본 국내에서 제기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脫亞論이나 야마카타의 주권선, 이 익선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일본군의 조선 출병에서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서술의 인식 수준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천진조약에 의해, 청군의 출병을 통보하자 일본군도 조선으로 출병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국의 통보 전에 이미 출진을 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조약에 의해서 반드시 출병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출병의 의도, 곧 청일전쟁을 염두에 둔 출병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청일전쟁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점을 대체로 약화시켜 보고 있다. 조선의 撤兵을 거부하면서 조선의 궁궐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들고 나온 의도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는다. 일본이 청국에게 조선의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하자는 제의는 결국 이를 거부할 청국과의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이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풍도 앞바다에서 청국의 군함에 先制공격을 단행하고, 몇일 후에 선전포고하였다. 그 침략성을 잘 보이는 점이다.

청일전쟁에서의 일본 승리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일본의 우세한 화력으로만 설명하기도 하지만, ①③에서는 국민들의 忠君, 愛國精神의 확산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승리로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의 ‘조선 독립’ 문제를 거론하지만, 특히 ①

19) 《동경서적 교사학습자료》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본이 <동양평화를 위하여>라는 선전 포고(1894.8.1)에서 “조선은 독립국인데, 청국이 스스로 속국이라고 하면서 내정 간섭”하여 동양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비해 청국은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라는 것은 200여년 이래의 사실”인데, 일본이 조선에 무력을 행하여 조선인의 고통을 구하기 위하여 출병한다고 하였다. 결국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은 조선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226쪽).

③에서는 이를 “고대 동아시아 질서의 붕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 문제는 여전히 일본의 침략 명분이었을 뿐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의 삼국 간섭과 이로 인한 일본 국민의 ‘臥薪嘗膽’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한 사실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이 삼국 간섭 이후 한반도에서의 세력 만회를 위해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조선의 왕비를 시해한 것을 서술한 교과서는 거의 없다. 아울러 일본에 침략에 대한 조선의 의병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다.

3. 한국 교과서의 서술

방곡령: 갑신정변으로 조선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은 일본은 경제적 침투를 더욱 강화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은 조선에서 쌀과 콩 등의 곡식을 많이 사가고 영국제 면제품을 팔았다. 가뜩이나 흉년이 잦은 상태에서 일본으로 곡식이 유출되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더욱이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의 상인들이 몰려와 일본 상인들과 경쟁적으로 활동을 넓혀 감으로써 조선의 농촌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대하여 일부 지방에서는 방곡령을 내려 일본 상인들이 곡식을 사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방곡령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조선 정부에 배상을 강요하였고, 정부는 이에 굴복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농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여 농민들 사이에는 일본을 배척하는 기운이 널리 퍼졌다. (방곡령에 대한 도움글. 1889년 9월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의방곡령).(205쪽)

농민전쟁: ... 전주 화약 후 정부는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궁궐을 침범하였으며,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처럼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노골화되자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다시 일어났다. 서울을 향해 북상하던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하여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할 수 없어 많은 희생을 치른 채 물러나고 말았다.(209~ 210쪽)

근대적 개혁의 실시: 일본군은 경복궁을 포위하고 민씨 세력을 몰아낸 후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이에 김홍집을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고 ... (211쪽) 일본의 조선 침략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212쪽)

삼국간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조선은 일본의 더욱 심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다. (...) 일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고종과 명성 황후는 러시아 세력을 이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221쪽)

을미사변과 단발령: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진하던 일본은 조선의 이러한 움직임에 크게 당황하였으며, 명성 황후는 일본의 조선 침략에 방해가 되는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일본 공사는 일본군과 일본인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궁궐에 침입하고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을미사변이라고 한다(1895). 일본의 야만행위는 조선의 주권을 짓밟은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을 비난하는 여론이 드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모르

는 일이라고 발뺌하였다.(221~222쪽)

을미의병: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와 내정간섭으로 우리 민족의 반일 감정은 더욱 고조되었다. ... 의병운동은 일본을 침략을 막아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민족운동의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222쪽)

청일전쟁 전후에 대한 한국 국사교과서의 기술은 일본의 침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농민층에 의한 개혁운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일어난 전자는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패배하였고, 후자는 일본의 간섭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먼저 개항 후의 통상무역을 통한 경제 침략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 면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경제, 농민 경제의 파탄을 기술하고, 이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방곡령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정부의 철병 요구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일 전쟁 이후의 내정간섭과 “일본군과 일본인 불량배를 동원하여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왕후를 시해한 만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한민족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던 점도 지적하고 있다.

V.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과 병합

1. 러일전쟁 후의 일본의 조선 침탈

청일전쟁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한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또 한번의 전쟁을 치렀다(러일전쟁, 1904). 청일전쟁 이후 10년 동안 일본 국내에서는 국민 여론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동시에 군비 확장을 추진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동의와 후원을 획득하였다.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내세워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은 만주에 대한 개방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하였다. 이에 1898년 이후 영국·미국·일본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미·영과 동맹관계를 맺은 일본은 1898년 4월, 러시아와 ‘로젠-니시(西) 협정’을 체결하여, 조선 內政에 간섭할 경우에 서로 협의할 것과, 두 나라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에서 서로 방해하지 말 것 등을 약속하였다.

표면상으로 일시적인 세력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나 양국 사이의 대립은 날로 격화되어 갔다.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중국 침략을 위해 일본과 협조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하였다. 영국과 일본은 1902년에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상으로도 특별한 이익을 가짐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침략적 행동은 물론, 조선 민중의 반침략 투쟁에 의해 그 이익이 위협받을 때 필요불가결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英日同盟(제1차)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영·미의 전쟁에 대한 지원을 확인한 후, 드디어 1904년 2월에 인천과 여순항에서 러시아함대를 불시에 공격하여 전쟁을 개시하였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직전에 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였다. 일본은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5만 명의 군대를 인천에 상륙시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가운데 韓日議定書を 강제적으로 체결하였다. 한일의정서에는 ‘한국이 시정(施政)의 개선을 위해 일본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것과 ‘일본이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은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군사 지배를 자행하였다. 의정서의 후속 조치로, 그해 8월에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고문을 채용하도록 한 ‘협약’(이른바 제1차 韓日協約)이 체결되어, 顧問政治가 실시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었지만, 장기전을 치를 만한 경제력이 없었다. 전쟁 경비를 미국, 영국 등에서 조달하였던 일본은 점차 경비를 거의 소진하였고, 더 이상의 조달도 어려웠다. 그리하여 먼저 미국과 ‘카스라(桂)·태프트(Taft) 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고(1905. 7), 이어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영국의 중국시장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에서의 정치적 이익을 보장받았다(1905. 8). 그리고는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강화교섭을 전개하여, 러시아로 부터도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독점을 확인하였다(포츠머스 강화조약, 1905. 9).²⁰⁾

러일전쟁을 통해 국제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 지배를 확인받은 일본은 이또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조선에 파견하여 한국의 보호국화를 달성하였다. 이또는 일본군으로 왕궁을 포위하고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적으로 을사보호조약(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1905. 11). 조선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내정까지도

20) 일반적으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한다. 물론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사할린 등의 북방 지역 영토를 할양받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전쟁 배상금도 받지 못했다.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 생활고 등으로 희생하던 일본 국민은 이에 격분하여 난동을 일으켰다(日比谷 소각사건).

일본 통감의 지배를 받는 실질적인 식민지가 되었다.

을사조약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고종은 이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907년 6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대표(李相禹, 李儁, 李瑋鍾)를 파견하였다. 물론 이것은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오히려 이 문제로 고종은 강제적으로 왕위를 純宗에게 물려주었다. 이를 기화로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완전 장악하였다. 일본인 次官을 둔다는 정미7조약(한일신협약, 1907. 7)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고, 군대까지 해산시켜 버렸다. 이런 침략에 항쟁하는 조선 민중의 의병항쟁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 李完用, 宋秉畯 같은 친일파를 동원하여 ‘併合’을 달성하였다(1910. 8).²¹⁾

조선의 병합에 이르는 과정의 모든 조약은 항상 강압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그 강압성의 성격과 정도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 조약의 합법, 불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는 식민지화에 이루어진 모든 조약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조약이며, 조약에 따라서는 명칭, 형식 요건 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약 자체의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²²⁾ 이들 조약의 성격 및 조약 체결 과정, 요건 등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 한일의정서 : 정식 명칭은 議定書로 약식조약의 형식을 취함. 한국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맺은 조약으로 실제로 국권의 침탈이 시작된 조약.
- ㉡ 외국인고문협약 : 제목도 없고, 조약 체결의 위임사실도 없음. 외교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일종의 ‘각서’ 수준. 그런데 일본은 이를 ‘agreement’(조약)로 번역하여 미국, 영국에 보내어, 당사국 사이의 문제가 제3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 명칭도 없었는데, 일본은 후에 이를 <제1차 한일협약>으로 함.
- ㉢ 을사보호조약 : 조약 제목이 없었으나, 일본은 영어로 번역하면서 “convention”으로 하고, 후에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명칭을 붙임.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고, 회의에서 각 한국 대신을 위협하여 가결시킴. 황제의 재가가 없었음.
- ㉤ 병합조약 : 전권위원회에 대한 위임장, 협정문안, 비준서 등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황제의 서명이 없음.

조약에 명시된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분석하게 되면, 일본이 조선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황실을 보호하며, 동양의 평화는 물론 조선의 施政을 개선하기 위해 조약을 체

21) 러일전쟁 전후 및 한국병합에 이르는 과정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최문형, 2004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참조.

22) 이태진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 출판부)

결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침략의 명분이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학계에서는 ‘식민지화’라는 용어보다는 군사적 강압을 강조하여 ‘강점’이라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이 양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²³⁾

2. 일본 교과서의 서술

1) 러일전쟁에 대한 서술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물론 철저하게 일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삼국간섭 이후 러일전쟁으로 치달아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일본 국내의 찬반 여론, 대러 외교 정책의 대립 등도 소개하고, 또한 일본이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 대러시아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전승국이 되지 못하고, 전쟁의 경비도 영국, 미국 등의 도움으로 조달하였고, 이것이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다는 점을 기술한 점 등도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본의 한반도 및 만주에 대한 침략 야욕 때문에 일어난 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며, 또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국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러일전쟁의 성격이나 영향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이 전쟁의 결과가 아시아 각국에 어떤 영향에 미쳤는가는 점이다. 즉 황인종인 일본이 백인종인 러시아에 승리하게 되면서, 백인종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 지역의 민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를 어떤 시각에서 기술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서도 이런 점은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① 扶桑社(2005) ; ③ 自由社(2009)

세계를 바꾼 일본의 승리: ... 일러전쟁은 일본의 사활을 건 전쟁이었다. 일본은 이것에 승리하여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립했다. 근대국가로서 탄생한 지 얼마 안되는 유색인종의 나라 일본이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 대국이었던 백인제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식민지가 되어 있던 민족에게 독립에의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황색인종이 장래에 백색인종을 위협하는 것을 경계하는 黃禍論이 구미에 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①167~168, ③170쪽)²⁴⁾

23)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김기정, 2009 <앞 글> 참조.

24) 그리고 아래의 박스에 “일러전쟁과 독립에의 자각”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중국의 손문, 인도의 네루, 이란의 시인 시라즈이, 이집트 민족운동가 무스타파 카미르 등이 한 말들을 소개하고 있다.

② 東京書籍(2005)

일러전쟁: ...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져, 러시아는 1)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 ... 그러나 전쟁에 의한 희생이 큰 것에 비해, 일본이 얻은 권익은 적었던 것으로 국민이 격해져 정부를 공격 ... 일러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인도, 중국 등의 아시아 제국에 자격을 주었다. 일본을 배우는 근대화, 민족독립의 움직임이 높아졌다. 국민으로는 일본이 열강의 일원이 되었다는 大國意識이 생겨, 아시아 제국에 대하여 優越感이 강해졌다.²⁵⁾(159쪽)

①③에서는 당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러일전쟁의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유럽(백인종) 국가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 인종(유색인종)에 희망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들 사이에서 아시아 다른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 다른 나라 침략을 당연하게 여기는 大國意識이 싹튼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침략적 성격을 엿볼 수 있을 정도이다.

2)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침탈에 관한 서술

① 扶桑社(2005) ; ③ 自由社(2009)

한국병합: 일러전쟁 후, 일본은 한국에 한국통감부를 두고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구미 열강은 영국의 인도, 미국의 필리핀, 러시아의 외몽골 등, 자국의 식민지나 세력권의 지배를 일본이 승인하는 대신에, 일본이 한국을 영향 하에 두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국의 병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10년 일본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 내의 반대를 억누르고 병합을 단행했다(한국병합). / 한국의 국내에서는 민족의 독립을 잃은 것에 대한 격렬한 항의가 일어났고, 그 후에도 독립회복운동이 끈질기게 이루어졌다.(①170, ③172쪽)²⁶⁾

25) 이 책의 《교사용지도서》에서도 이런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즉 일러전쟁에 대한 아시아의 눈(네루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해주는 세계역사》)을 소개하면서, 아시아의 일국인 일본의 승리로 내쇼날리즘이 급속하게 동방 여러 나라에 퍼진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승리의 성과는 소수의 침략적 제국주의 諸國의 그룹에 한 나라를 첨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고통의 결과를 처음으로 맞본 것은 조선”이라고 하여, 일본은 제국주의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지적하였다.(229쪽)

26) 이 책의 《교사용지도서》에서는 한국병합의 목적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하여,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안중근의 이토 암살의 진상이라는 제목 하에서 “안중근이 들고 있는 이토의 죄상은 이토와 관계없는 황당무계한 것이었다”고 하고, 또 안중근이 일러전쟁을 만국에서 기념할 만한 공적이라고 했다가 한국의 독립이 보전되지 않음에 실망하였는데, 이것이 이토를 살해한 직접 동기라고 하여, 안중근도 러일전쟁을 지지하였고, 그의 의거는 민족적 저항이라기보다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감을 관계없는 이토에게 표출한 것이라는 논조로 접근하고 있다(264, 267쪽).

② 東京書籍(2005)

한국의 식민지화: 일러전쟁이 한창일 때부터 한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의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05년에는 외교권이 빼앗기고, 1907년에는 황제가 퇴위되었으며, 한국의 내정은 한국 통감부에 장악되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민족적 저항운동이 확대되고, 일본에 의해 해산된 병사들은 농민들과 함께 일어섰다. 이것은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일본의 지배에 대한 저항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다.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력을 배경으로한 식민지 지배를 추진하였다. 학교에서는 조선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였으며, 일본사와 일본어를 가르쳐, 일본인에 동화시키는 교육을 행하였다.(160쪽)

전반적으로 러일전쟁 이후 한국병합에 이르는 과정은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권 침탈이 일본의 무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조선 지배가 국제열강 사이에서 인정되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물론 이런 강압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들이 “불법적”이었다고 명시한 교과서는 없다.

일본의 한국 병합은 여러 조약을 통하여 착착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식민지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러일전쟁을 시작하면서 체결한 韓日議定書였다. 한일의정서에서 일본군이 한국 땅을 점거할 수 있게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행한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한 것이었다.

조약의 명칭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당시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임의로 부과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가령, 제1차, 2차, 3차 한일협약 등)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화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본래의 조약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약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교과서의 서술

을사조약: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때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은 영일동맹을 맺어 일본을 도왔다. 이러한 두 나라의 대립은 러일전쟁으로 이어졌다(1904). /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1905). 이 조약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 나라 내정 전반에 걸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사진설명: 고종 황제가 끝내 서명을 거부하였으므로 비합법적인 조약이다.(233쪽)

고종의 강제 퇴위: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은 그들의 침략에 방해가 되는 고종 황제를 군대로 위협하여 강제로 퇴위시켰다(1907).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났으나, 일본은 무력으로 이를 억누르면서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

다. 이 조약으로 일본인이 행정 각 부의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일본인 통감이 대한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237쪽)

간도 문제: ... 을사조약 이후 일본은 안동(단동)과 봉천(선양) 간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가 청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청과 체결하였다(1909). 이로써 간도 지역은 대한제국 관할에서 떨어져 나갔다.(239쪽)

독도 문제: ...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이 자주 울릉도 부근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아갔다. 이에 정부는 울릉도에 관청을 두어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고, 독도를 관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 중 일방적으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다. (주: 독도의 강탈: 1905년 2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이름짓고,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것을 통해 일방적으로 일본에 편입하였다).(240쪽)

국권침탈: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일제는 군대를 해산시켰다. 그 뒤에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장악하여 군사, 행정, 사법, 치안 등 모든 분야의 지배권을 장악해 나갔다. / 또 일제는 강력한 항일전쟁을 폈던 의병 활동을 어느 정도 잠재우자,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일진회의 이용구, 송병준 등 친일파를 앞세워, 나라를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는 국권침탈이 한국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장하려는 술책이었다. / 마침내 일제는 군대와 경찰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이미 차단하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매국 내각과 이른바 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1910). 이로써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면서 발전해 온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노예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255쪽)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한국민의 반일 민족운동도 서술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 침탈은 러일전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외중립선언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자주적 국권 수호를 저지하고 행한 ‘국권 탈취’였다. 물론 조약문에서 내세웠던 施政改善, 東洋平和 등은 식민지 침탈을 위한 단순한 명분이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더 부각하여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던 고종의 활동(헤이그 특사파견 등)을 강조하고, 이 조약이 “비합법적”이었음을 지적하여, 조약의 불법성 및 무효 문제를 다룬 국내의 연구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일본교과서와 아주 다른 점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 침탈과 영토 문제(독도, 간도)를 연결해서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침략과정에서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고,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 영토로 선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VI. 맺음말

1876년 문호개방(조일수호조규)을 계기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근대적인 국제질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중국 중심의 화이체제가 소멸되고, 다른 한편으로 만국공법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는 불평등조약체제가 형성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에 이르는 과정에 한일 간에 맺어진 많은 조약들도 이와 같은 근대적 국제 질서, 법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맺어진 조약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군사력, 강제력에 의해 체결된 것이며, 이런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합법성을 띠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 한일 간에 맺어진 여러 조약들이 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근대적 한일관계를 시작한 조일수호조규에 대해서 한국은 일본의 침략성과 불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조향을 중시하고 있다.

1880년에 초반 한국의 개혁사업에 대해서 일본의 교과서는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자주적 근대개혁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의 일본의 한국 침략과정에 대해서 일본의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성을 다소 약하게 표현하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인정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더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과 자주적, 주체적 근대개혁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한 한국의 ‘망국’은 일본의 강제,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병합에 이르는 조약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그 바탕에 깔고 서술하고 있다.

양국의 교과서는 모두 自國史, 自民族史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근대국가의 형성, 발전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대국가 형성기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 즉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침탈하고 지배했다는 역사에서는 역사 해석에서 많은 차이를 낳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근대사를 제국주의 국가, 강국으로 성장해간 화려한 역사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지배하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능한 소극적으로 서술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제국주의 침탈이 한국 주민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지만, 한

국의 주체적 근대화 개혁의 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는 거의 없다.

한국의 교과서는 이 시기를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의 과정으로,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역사로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으로 결국 대한 제국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민의 주체적 개혁과정과 항일운동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결국 한일 간의 역사교과서 기술의 차이점은 일본의 근대사를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서술할 것인지, 아니면 제국주의 침략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서술할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역사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아픈 과거와 이를 바라보는 상반된 역사인식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공통의 역사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비평문]

기무라 간(木村幹)

본 논문은 한일 양국의 교과서 기술과 관련하여 조일수호조규, 1880년대 초 조선왕조의 근대 개혁, 청일전쟁 그리고 한국 합병에 이르는 과정 등 각각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본 비평문에서는 주로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하여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첫 번째 문제점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과서의 범위가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일본의 것으로는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5), 《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2005) 그리고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 등 3책이며 한국의 것으로는 《중학교 국사》(교육인적자원부, 2002)의 한 책이다. 대상을 중학교 교과서로 한정된 것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도,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만으로도 다수의 출판사에서 서로 다른 교과서가 발매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겨우 0.57%와 1.1% 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한 扶桑社와 自由社の 교과서를 과반수의 사용비율을 차지하는 東京書籍 교과서와 마치 동등한 존재인양 나란히 놓고서 ‘일본을 대표하는 교과서’인 것처럼 분석하는 것은, 샘플링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최소한 일본 국내에서 각각의 교과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많은 교과서 중에서 이들 교과서를 선택한 데 대한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분석 방식은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문제는 본 논문이 개별 사건으로서 한반도에 관한 사건만을 대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주로 일본의 역사를, 그리고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한국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한반도에 관한 기술이 한국의 역사 교과서 보다 적은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교과서에 한국 교과서와 같은 분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보다 큰 문제는 본 논문에서 각 교과서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현재 한국 역사학계 일부의 인식을 전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점은 한국 합병에 관한 기술의 분석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조약에 대해 조약의 형식과 일본의 강압, 황제의 서명 유무 등을 이유로 이들 여러 조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일본에 의한 한국 지배는 ‘식민지’ 지배가 아니라 ‘강점’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또 그 견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특정 교과서의 한국 합병에 관한 기술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국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조약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또 한일 양국 내부에서조차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국 합병이 비합법이라고 하는 한국 학계의 주장은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법학자 다수가 지지하는 데에도 아직 이르고 있지 못하다. 어쨌든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는 최소한 다른 쪽의 주장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논쟁적인 문제에서 한쪽의 입장만 소개하고 한일 양국의 교과서의 기술을 평가하려고 하는 본 논문의 자세는 공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문제는 미시적 사실과 거시적 의미 부여의 혼동이다. 물론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점차 대륙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이 일본이 당초부터 그와 같은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메이지 정부가 당초부터 한반도와 대륙에 대한 확고한 침략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고, 스스로 해외로의 세력 확장을 통해 경제적 및 기타 이익을 획득하려고 한 원대한 ‘제국주의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한반도와 대륙으로의 세력 확장이 마치 당초부터 명확한 ‘제국주의’적 의도를 지니고 이루어진 것처럼 단정하고 또 그들 주장이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역사를 가르칠 때 과도하게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개의 작은 시행착오에서 커다란 과오로 이끌려 가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그러한 관점을 덧붙임으로써 더욱 뜻이 있는 논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문제는, 본 논문의 분석이 교과서 전체의 ‘작품’으로서의 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교과서가 “‘근대의 국제 질서’를 강조하면서’, ‘근대의 양면성인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 눈을 피하고’ 있다고 하는 단정적 기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일본의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페리 내항 이전에 서양 열강에 의한 아시아·아프리카 식민지화에 대한 기술이 존재하며 그 결과로서 강요된 서양 열강과의 통상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한 기술이 존재

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근대 사회가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이 시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교과서가 조일수호조규에 대해 ‘불평등조약’이라고 기술하는 경우 당연하게도 그 ‘불평등성’은 서양 열강과 일본 사이의 불평등조약과의 유추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큰 구성을 이해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 특정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만 착목하여 문제시하는 것은, 교과서라는 하나의 ‘작품’에 대한 분석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은 대상의 표본 선정 방식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평가의 기준, 또 어떤 특성의 통합된 ‘작품’에 대한 분석의 기본적인 방식에 한계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교과서라는 하나의 ‘작품’의 기술을 분석하는 데에 각각의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텍스트를 쫓아서 명확히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각각의 기술이 분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극히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이 본 논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또 본 논문의 주장이 모두 잘못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작품’ 전체의 스토리를 읽어내고 그를 전제로 개별 기술에 대해 의미 부여를 정치하게 행한다면 본 논문의 주장 중 많은 것이 강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교육 현장에서 개별 역사적 사실은 앞뒤의 역사적 사실과 개별 교과서가 제시하는 큰 스토리와의 관계에서 이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이 ‘작품’으로서의 교과서가 제시하는 보다 큰 스토리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개별 기술의 차이에만 착목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장의 개연성을 스스로 한정지어 버렸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비평자의 생각을 정리해 두자. 중요한 것은 본 논문이 제시한 한일 양국 교과서 기술의 기본적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생겼으며 또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개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별 교과서의 기술은 학교 교육의 모습을 좌우하는 요소의 하나에 불과하다. 작은 어구의 차이와 기술의 차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역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지며 개별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둔다면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 제 연구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며 본 비평을 끝맺고자 한다.

[집필자 답변]

기무라 교수는 교과서를 서술한 한일 역사학계의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양국 사이에 역사 분쟁, 교과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중요한 연구를 행하였고, 또 이런 관점에서 본인의 논문에 대해 비평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한 교과서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량 제한으로 이미 분석했던 고등학교 일본사, 세계사 교과서 등을 부득이 제외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으로 3종을 택한 것은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가 어떤 것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扶桑社 교과서, 自由社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이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채택율이 가장 많은 東京書籍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런 선택이 우리 교과서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에 관한 개별 사건 만을 다루고, 또 일본 교과서에 한국 교과서와 같은 분석이 없다는 것을 요구한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한 점이다.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교과서에서의 한국 서술의 인식과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관련 기술에는 비록 분량이 미미하더라도, ①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서술하고, ②역사를 보는 미래지향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올바르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교과서 기술에 대한 평가가 현재 한국학계 “일부의 인식”을 전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고, 그 예로 한국 병합에 이르는 여러 조약을 들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병합에 이르는 과정의 조약의 유효성 문제를 따지는 학문 연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침략 하에서 일어난 침략 행위를 법적인 문제로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약의 불법성, 무효를 거론한 것은 절대로 한국학계 일부의 견해가 아니다.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이를 논쟁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을사조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조약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었고, 또한 조약 체결의 최종 결재권자인 고종이 스스로 조약 체결을 부정하였다(단적으로 헤이그 밀사사건 등). 그 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점은 지금도 남북한 학계에서 공통

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조약이 합법적이었다고 서술한 한국 내의 연구나 교과서 기술이 있는가?

넷째, 메이지 정부가 과연 초기부터 조선 침략과 같은 “원대한 제국주의적 계획”을 가졌는가라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 내부에서도 논쟁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일본이 그런 의도와 계획이 없었고, 단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연히 정책으로 취해진 결과였다고 한다면, 왜 1894년 조선 정부의 청일 양군의 철수를 무시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을까? 당시 조선의 독립이 왜 그렇게도 일본에게 중요하였을까? 또 러일전쟁에서 왜 동양평화라는 이름하에 전쟁을 했을까? 이런 지적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다섯째, 교과서 분석은 전체를 ‘작품’으로 보고 이를 거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의 논문에서도 가장 신경을 기울인 점이고, 전반적으로 교과서가 가진 역사인식의 기반 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리 교과서 위원회에서 정한 주제와 원칙, 즉 기술 내용 분석에 더 중점을 두면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무라 교수가 지적한 거시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서술 내용의 분석에서도 교과서가 가진 역사인식을 거시적으로 그려내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무라 교수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것보다 역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한일 간에 야기된 역사분쟁도 결국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기무라 교수의 연구만 보더라도 여전히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의 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역사를 다시 보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